

특집

정부의 남북 경협 활성화 방안: 평가와 과제

정경 분리 원칙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서동만

규제 철폐와 정부의 역할 • 박세환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부작용 해소 방안 • 최수영

정경 분리 원칙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서동만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정경 분리의 전제

정 경 분리 원칙이란 기존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두고서 거기서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기존 대북 정책 전반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정경 분리 원칙이란 정치적으로는 대결 상태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상호 이익의 관점에 따라 교류를 확대한다는 정책이지만, 그때의 정치적 대결이란 것이 무력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간에 정경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그동안 남북한간에 지속되었던 '적대적 공존'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평화적 공존'·'협력적 공존' 관계를 수립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으로는 전면적인 적대 정책을 고수하면서 정경 분리 원칙을 시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란 점에서 정경 분리란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질서 수립이 전제되어 있는 정책이다. 물론, 현재 남북한 사이에 적용된다는 정경 분리란 과거 냉전 상황 하의 그것과는 달리 쉰세계적인 냉전 붕괴 이

후에도 여전히 냉전이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내 특수 상황의 산물이다. 그 배경은 다르지만, 중국·대만 사이에도 탈냉전 하의 분단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나 80년대 중반 이래 상당한 정도로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사실 전세계적인 냉전 붕괴라는 배경 하에서 80년대 말·90년대 초에 걸쳐 한국·구소련, 한국·중국 수교가 이루어지고 북일 수교 교섭이 진전되는 가운데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는 상황적 흐름을 보면, 적어도 평화 공존 하에 새로운 남북 관계가 조성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한반도에도 성숙했던 것이다. 일시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문제가 새로운 대립 요인으로 등장했으나 베를린 핵협상 타결로 북미 간에도 냉전적 대립은 해소 과정에 있었다. 남북간에 정경 분리에 입각한 교류·협력은 국제적인 정세의 흐름에서 볼 때 상당히 때늦은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한의 딜레마

기본적으로 정경 분리 원칙이란 북한체제가 처한 상황에서 오는 체제 생존을 위한 요

구에 대해 남한 체제가 그것을 수용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경 분리 원칙이 남북한 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체제의 향후 방향과 관련하여 정경 분리가 갖는 의

남북한간에 정경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그동안 남북한간에 지속되었던 '적대적 공존'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평화적 공존'·'협력적 공존' 관계를 수립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으로는 전면적인 적대 정책을 고수하면서 정경 분리 원칙을 시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란 점에서 정경 분리란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질서 수립이 전제되어 있는 정책이다.

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현재 구소련·동구의 붕괴 및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의 변용이란 현실 앞에 고립되어 있다.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없는 개방'이란 기조 하에서 개방으로 인한 체제 이완을 막으면서 경제특구에 대한 제한된 개방이란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해, 경제적 개방으로 인한 영향이 정치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서서히 내부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남한 기업과의 교역이나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남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면서 남한 정부와의 교섭을 회피해온 것은 이미 정경 분리 원칙을 나름대로 적용해온 셈이 된다. 북한은 1993년 8월 7일 김일성이 발표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서 남북한의 왕래·접촉의 확대, 개인 소유권을 포함한 복수 소유권의 허용 등을 선언한 바 있다. 이 내용은 북한체제 내부를 규정하는 헌법 상의 규정과는 별개로 설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내부와는

차단된 영역에 대하여 외부 자본주의 세계와의 교류나 경제 활동을 허용하고, 따라서 자본주의적 소유나 경영을 활용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는 북한의 전통적인 통일 전선 전략에 토대를 두고 수립된 방침이기는 하지만 북한 나름의 정경 분리 원칙의 본격적 개시를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 9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의 대외 경제 정책은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경제특구에 대한 제한된 개방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식으로든 북한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언제 개혁이 단행될지 속단할 수는 없으나 개혁이 추진될 경우 그것이 정치와는 일단 분리된 경제체제 개혁이 될 것이란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이 구소련과 달리 체제 붕괴를 피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다 해도 중국이나 베트남의 이러한 경험을 살리려

정경 분리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 정책 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동안 적대적 남북 관계 하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주체들이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통일·북한 분야에 있어서 구조 조정은 국가 기구, 그 가운데서도 안보 기구가 대북 정책 전반을 거의 주도적으로 관장했던 데서 벗어나 그 권한을 정치권·시장·시민 사회로 대폭 이관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대외 관계 특히, 대남 관계에 있어서 정경 분리 원칙과 친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속성상 대남 관계에 있어서 전면 화해란 체제 붕괴를 뜻하며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처한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및 외부와의 경제 협력이 불가결하며 특히 이 점에서 미국·일본외에 한국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장차 남북한 관계 개선보다 앞설지도 모르는 북한과 미국·일본의 관계 개선 및 국교 수립에 대한 남한측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남한과 일정한 정도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한과의 경제 협력도 꾀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북한체제가 직면한 최대의 딜레마이며, 이는 남한체제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딜레마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교류 협력의 확대밖에 없다.

정경 분리와 남한의 대북 정책 분야 구조 개혁

정경 분리란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적대적 관계에서 경제만을 분리하여 협력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남한에서 정경 분리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 정책 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동안 적대적 남북 관계 하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주체들이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통일·북한 분야에 있어서 구조 조정은 국가 기구, 그 가운데서도 안보 기구가 대북 정책 전반을 거의 주도적으로 관장했던 데서 벗어나 그 권한을 정치권·시장·시민 사회로 대폭 이관하는 것을 뜻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경 분리란 말 그대로 대북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분야는 과감하게 시장에 이관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에 대처하여 각 나라가 내부 구조 개혁에 힘쓰고 있으나, 그 요체는 관료 기구에 의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시키는 데 있다. 정경 분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 경제 분야는 가능한 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긴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대북 투자나 대북 경제 거래에 있어서 그 결정은 그 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국가 안보나 군사 기술에 관련되는 물자를 제외하고 그밖의 거래에 관해서는 규제가 과감하게 철폐되어야 할 것이

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부는 대북 투자의 상한선을 철폐하고, 투자 대상에 있어서도 일부 규제 분야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내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대북 경협에 정보 기관이 감독자로서 개입하는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위의 경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대북 접촉에 있어서 민간 단체의 역할이다. 대북 식량 지원에 있어서 국제 민간 단체가 수행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북한 당국이 남북한 정부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을 때 국내 시민 단체들의 대북 지원도 그 액수는 많다할 수 없어도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와 민간 단체의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 대북 정책은 훨씬 순조롭게 진전되어갈 것이다. 북한의 통일 전선 전술에 대해 창구 단일화 정책으로 맞선다는 것은 남한 사회가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의 성장에 근거한 다원적 사회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북한의 통일 전선이란 북한체제의 약점이지 강점이 아니며 거꾸로 남한 사회의 강점은 그

북한의 통일 전선 전술에 대해 창구 단일화 정책으로 맞선다는 것은 남한 사회가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의 성장에 근거한 다원적 사회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북한의 통일 전선이란 북한체제의 약점이지 강점이 아니며 거꾸로 남한 사회의 강점은 그 다원성에 있는 것이다. 정경 분리 원칙이란 창구 다원화를 내포하는 것이며 남한 사회의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수단이다. 이미 남한 정부는 식량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 단체의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고 김대중 대통령의 신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방침은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원성에 있는 것이다. 정경 분리 원칙이란 창구 다원화를 내포하는 것이며 남한 사회의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수단이다. 이미 남한 정부는 식량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 단체의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고 김대중 대통령의 신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방침은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 출범에 따라 이러한 이관 방침이 속속 발표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남북한 관계는 제한적인 긴장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정경 분리 정책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따른 남북한 긴장 고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남북한 관계는 남북한 각각의 내부 정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이 점에서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논의 과정이 정치권에서 활성화 되는 것도 중요해진다. 민간 및 기업 주체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형성될 사회·경제적 기반이 정치적 기반으로 이어질 때 정경 분리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

북한의 적대적인 대남 정책에서도 그에 못지 않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전통적인 통일 전선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중요해진다. 이 점에서 김정일 총비서가 1998년 4월 18일 서한 형식으로 공표한 '전민족 대단결 5대 방침'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는 길은 대북 정책 분야에 있어서 국회 및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는 일차적으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의회 및 정당이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하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된다. 아직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건드릴 수 없는 수많은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대북 정책에 대해 의회는 충분히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국가 안보상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국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 정당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조차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내세워 봐야 손해라는 피해 의식에 젖어 이렇다 할 과감한 공약이나 정책 개발 및 제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각급 선거에서 대북 정책은 정당 측이 자발적으로 제기하는 정책 이슈가 될 수 없었다. 이번 대선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풍 후유증에 대한 수습 작업은 정당 및 국회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져야 한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정당의 정론 형

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일부 언론들의 선정적인 여론 물이 보도가 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풍토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경 분리와 북한의 대남 통일 전선 변화 가능성

위에서 남한에서 정경 분리 원칙이 시행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북한의 적대적인 대남 정책에서도 그에 못지 않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전통적인 통일 전선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중요해진다. 이 점에서 김정일 총비서가 1998년 4월 18일 서한 형식으로 공표한 '전민족 대단결 5대 방침'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이 1993년 4월 7일 발표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일정한 부분에서는 종래 방침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다.

우선 '남조선의 집권 상층이나 여당·야당 인사들, 대자본가, 군 장성들'과도 '민족 대단결의 기치 밑에 단합할 것'을 강조하여 남북 접촉 대상의 폭을 넓히려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남북한사진전 개최를 위한 여야당 국회의원의 방북 계획, 남북 경험 추진을 위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방북 계획 등으로 이미 실현되고 있다. 나아가 '남조선 당국

자들'과 '선행 통치자' 내지 '역대 통치자'를 구별하고 현재의 남한 신정부에 대한 비난 등 그 규정을 유보함으로써 남한 정부와의 대화 문호를 계속 열어놓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남·북·해외동포간의 왕래·접촉·대화에 대해 가장 큰 비중을 둬으로써 남한 정부의 정경 분리 정책이나 이산 가족 재회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특히, 남북의 '당국자·정당·사회 단체·각계 각종 대표, 해외동포'간의 '쌍무적·다무적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지적함으로써 당국자간 대화와 민간 대화를 동시에 전개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종래 당국자간 대화를 거부하고 민간 단체와의 접촉만을 고집하던 태서 크게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비료 제공을 위한 남북한차관급회담은 결실은 보지 못했으나 남한의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비정부간 상호 접촉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번 김정일 총비서의 서한은 북한 당국이 종래보다 유연한 대남 정책을 펴고 있음을 최고 당국자의 문서를 통해 실증해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서한에서 제시된 접촉 대상 확대나 당국자간 대화 방침 등으로 '남한의 집권 세력이나 남한 정부를 고립'시킨다는 북한의 전통적인 통일 전선 정책에 있

나아가 남·북·해외동포간의 왕래·접촉·대화에 대해 가장 큰 비중을 둬으로써 남한 정부의 정경 분리 정책이나 이산 가족 재회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특히, 남북의 '당국자·정당·사회 단체·각계 각종 대표, 해외동포'간의 '쌍무적·다무적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지적함으로써 당국자간 대화와 민간 대화를 동시에 전개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어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지는, 앞으로 발표될 이 서한에 대한 공식 해설이나 고위 간부의 보충 발언, 북한 당국의 남북 대화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남한 당국에 대해서는 "반북 대결 정책을 버리고 연북 화해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접촉 대상을 확대한 것도 "과거의 과오를 뉘우쳐야 한다"는 조건부이기 때문이다. 이는 조건 불이행을 구실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논리이며 무엇보다도 남한과의 적대 관계를 전면 청산한다는 것은 북한체제의 이완·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을 갖고 있기에 북한의 대남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남한 정부의 정책은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정착하고 더욱 확대됨으로써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일관된 대북 정책을 실행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설사 북한의 통일 전선 정책에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현재 북한 사회가 처한 난국 및 남한 사회에 있어서 민주화의 정착이란 현실에서 볼 때, 그것은 북한체제의 유지라는 대

우선은 정부간 교섭을 고집하기 보다는 말 그대로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측에 부담이 안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적절한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창구 개설을 위해서는 북한이 과거 남한에 대해 제의한 바 있었던 제안을 북한측에 상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내적 이유외에 대남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은 점차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 해도 남한 민주주의의 정착 및 시민 사회의 성장에 신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전망에 서서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창구 개설과 과거의 예

현재 교역이나 투자 등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은 북한 당국 및 기업과 남한의 개별 기업간에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교류 협력이 진전되는 과정에서는 개별적으로 발생한 이해 갈등이나 나아가서 경제 협력 전반을 조정하기 위해 양측 기업 차원을 넘어선 주체간에 협의를 진행할 창구가 필요해질 것이다. 또한 분쟁 해결 및 투자보장협정 등 남북한 당국이 참여해야 할 최소 한도의 교섭도 요청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선은 정부간 교섭을 고집하기 보다는 말 그대로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측에 부담이 안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적절한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창구 개설을 위해서는 북한이 과거 남한에 대해 제의한 바 있었던 제안을 북한측에 상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최

초의 정경 분리의 예는 1959년도에 북한측이 제안한 바 있다. 1958년도에서 1961년까지 시기는 북한이 대남 경제 교류 제안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 시기에 북한은 전후 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개조를 완료하고 나서 남한 경제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당시 곤란한 처지에 있던 남한 경제를 남북한이 협력하여 부흥시키자고 적극적으로 남북 경제 교류를 제안했던 것이다. 1959년도 북한측은 '정치 문제와는 관계없이 남북조선의 경제 발전의 연계와 조절, 또 남북조선의 경제 교류를 실천할 데 대한 문제들을 협상' 하자고 '남북 조선의 실업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순전한 경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1960년도에는 연방제를 제안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면 '정치 문제와는 별개로 순수한 경제 교류라도 추진' 하자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한 바도 있다. 이때 제시된 안은 양측의 실업계 대표로 구성된 경제위원회, 북한의 조선수산협회와 남한의 수산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공동어선대, 남북한 실업계 대표로 구성되는 연합상업회의소, 남한의 기업가에게 자금을 공급할 국영공업은행, 평

양과 서울에 각각 설치하는 상품 견본 시장, 남북한 중요 도시에 설치하는 공동 시장, 남북한 상사들이 공동 출자하는 합동무역상사 등이다. 이처럼 당시 북한측 제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교류를 총괄하는 실업계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안별·분야별로 해당 공동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남한측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창구로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정부간 기구로서 단기적으로는 그 실현이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추진해나가되 당장 그 실현이 곤란하다면 중국과 대만의 예처럼 양측에서 교류 협력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민간 형식의 조직이 창구가 되어 전반적인 사항을 교섭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것이며, 사안에 따라 기존의 각급 경제 단체, 각종 업종별 단체 등이 창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과거 북한측의 제안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현시점과 과거 50년대말·60년대초 남북한의 입장은 완전히 뒤바뀐 감이 있다고도

장기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추진해나가되 당장 그 실현이 곤란하다면 중국과 대만의 예처럼 양측에서 교류 협력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민간 형식의 조직이 창구가 되어 전반적인 사항을 교섭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것이며, 사안에 따라 기존의 각급 경제 단체, 각종 업종별 단체 등이 창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만큼, 과거의 북한이 제안한 내용을 북한측에 상기시키는 것은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측 입장에서 볼 때 과거 자신이 제안한 것이란 점에서 북한측의 체면을 살려주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30년 이상이나 지난 과거의 예를 그대로 현재 상황에 원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적어도 현시점에서 IMF 상황 이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는 하나 남한측은 당시 북한측이 제안했던 정도의 내용은 제안하거나 수용할 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경 분리 원칙에 따른 대북 교섭에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2